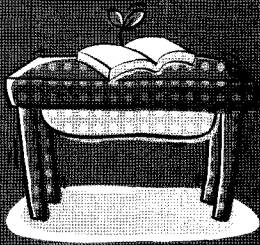


한·미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가 다시 시끌시끌하다.

지난달 말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농축산단체들이 국회에서 한·미 FTA 상정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가 하면 9월 6일에는 한·미 FTA 비준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방문,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농업계 선 대책 건의사항 11개항을 제시하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란 연구과제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해 협정발효 후 15년간 매년 8,150억원씩

## 농민단체 요구사항 선결돼야...



### 축산 계열화사업법과 상호 보완 효과 강구

본지·김한웅 상무

15년간 12조2,25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작년 말 한·미 FTA 재협상 이후로 협상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이 미국 의회의 비준에 대비, 우리가 먼저 FTA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설명은 무엇인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꺼림직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타 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정이 조금은 낫다는 닭고기 업계도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수입닭고기 소비시장이 형성돼 있는 가운데 20%의 관세율이 순차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수입육 소비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 육계사육농가들도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FTA는 미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칠레, EU와의 FTA가 발효 중이고 이외에도 중국을 비롯 많은 국가들이 FTA를 기다리고 있다.

농수축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 ▲ 후계농업인력 육성대책 마련 ▲ 농어가 소득안정화방안 강구 ▲ 축산 및 원예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 ▲ 농산물 생산비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농업인 노동 및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 농업계 의견이 반영된 농협 신경분리 완수 ▲ 농업금융 경색 완화 및 농업인 세제 개편 등이다.

요구사항에 대한 선 대책이 마련된 후 FTA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육계업계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설 현대화다.

비닐하우스 계사, 낙후된 개방식 계사 등 전체의 약 50~60%가 시설개선 대상이다.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완성돼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외국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우리 닭고기 시장을 고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가칭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육계사육농가들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제정 추진은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체간의 상호비방 보다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계열화사업체와 농가가 서로 보완해가며 상생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열화사업법 내에는 축산계열화사업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육성시책강구, 물량 수급조절, 종축의 생산이력, 사료, 병아리 등 원자재의 품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계열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제기됐던 모든 사안들이 대부분 이 법률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이다.

FTA 타결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과 가칭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제정돼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국내 육계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